

한경협 ESG Bulletin

2025. 8 | 제 18 호

K-ESG 얼라이언스 사무국에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ESG 저변 확대를 위해 한경협 ESG경영자문단이 ESG 핵심 이슈에 대해 꼭 짚어 설명드리는 'ESG Bulletin'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과 22대 국회의 입법 동향

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 조남혁 보좌관

최근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와 노동 현안은 우리 사회에 '노동정책의 변곡점'을 요구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장관이 산재 관련 책임을 장관직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집권 초기부터 정부는 "노동존중과 안전,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단기 현안 대응과 중장기 로드맵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22대 국회 역시 노동 분야 입법에서 전례 없는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법안을 누가 먼저 발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주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법안을 제출하면서 '법안 과잉 경쟁'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국회 입법 동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정책과 제도 변화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5대 축과 세부 내용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다수 노동현장과 경영계에 민감한 주제를 포괄하지만, 큰 틀에서 5대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책 축	핵심 내용	목표/특징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체계, 발주·설계 단계 위험 차단, 중대재해 수사 역량 강화, 산재보험 보편화	203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비율 OECD 평균 수준(1만명당 0.29명)으로 감축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노동기본법’ 제정, 공무원위원회 법제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2027년까지 임금체불 절반 감축, ‘임금체불 제로 시대’ 목표
노동존중과 권리 보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교사·공무원 노동권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분쟁조정 기능 신설	사회적 대화 활성화, 초기업 단위 교섭체계 구축
일·가정·삶의 균형	주 4.5일제 로드맵, 실노동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급여 상향, ILO 협약 비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삶의 질 향상
노동 대전환 대응	정년연장, 퇴직연금 강화, 고령자 안정지원금 신설, AI 인재 양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개선	현장 대응과 미래 비전 병행

이 5대 축의 주목할 점은 단기 현장 대응과 중장기 미래 비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 즉각적 현안 해결뿐 아니라, 정년연장·퇴직연금 강화·AI 인재 양성 등 장기적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며, 개별 목표가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2. 22대 국회 노동입법 동향과 특징

22대 국회는 노동 관련 법안 발의에서 전례 없는 과잉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사 법률안 중복 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노란봉투법’은 7명의 의원이 각각 다른 색채의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심사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역시 단순히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문구를 두고 6명의 의원이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며, ‘근로자냐, 노동자냐’ 혹은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등 용어 선택 문제까지 입법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3진 아웃제 등 ‘강한 규제 법안’이 잇달아 거론되면서, 산재 사망사고

여파로 안전 관련 입법 강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상임위 내부에서도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며, 각자가 노동 친화적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맞물려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3. 노동정책 실현과 국회 입법 전망

단기적으로 유사 법률안이 쏟아지면서 일부는 신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 민생법안이나 비쟁점 법안은 '밀려나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재 예방과 임금체불 근절 등 국민적 공감대가 큰 주제는 비교적 빠른 통과가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이 맞물리면서 현장 정책과 제도 개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진척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국회 입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그리고 입법 경쟁 속에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이다. 노동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정부와 국회가 경쟁을 넘어 협력할 때 비로소 '노동존중 사회'라는 비전이 구호를 넘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야당이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당 주도의 입법과 정책 추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할 수 있는 환경과 합리적 대안 논의가 병행될 때, 노동정책은 단순한 규제와 구호를 넘어 현장의 안전과 공정성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